국내 대기업들이 주총을 앞두고 국민연금에 가장 큰 압박을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. 게티이미지국내 대기업들이 ‘주주총회를 앞두고 가장 큰 압박을 느끼는 대상’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. 중견·중소기업들은 소액주주연대에 가장 큰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.한국경제인협회(한경협·옛 전경련)가 13일 발표한 ‘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 기업 의견’을 보면, 응답 대기업의 50%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가장 큰 압박을 느낀다고 답했다. 이어 국내기관투자자(21.4%), 소액주주연대(21.4%) 순이었다. 한경협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연금 지분 보유 현황을 공시한 기업 156개(2022년 기준)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.조사결과를 보면, 국민연금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나 임원 보수의 적정성 등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.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사전 정보를 수집하는데, 기업이 받은 주요 요청사항은 △이사·감사·감사위원·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(15.0%) △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에 대한 자료·설명(10.9%) △배당계획 관련 자료나 중장기 배당정책 수립(4.7%) 등이었다.중견·중소기업이 주총을 앞두고 가장 큰 압박을 느끼는 대상은 소액주주연대(39.0%)였다. 국내기관투자자(18.6%), 국민연금(16.9%)이 뒤를 이었다.조사대상 기업의 87.2%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때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. △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탁해야 한다(40.4%) △국민연금이 찬반 의결권만 행사하고 그 외 주주권 행사 활동은 제한해야 한다(35.9%) 등의 주장이다. 국민연금이 더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12.8%에 그쳤다.